

우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했습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명단 공개와 가택 수색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구민에 대한 예의이자,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거리에서 번호판 영치 단속 중에 만난 한 1톤 화물트럭 운전사의 사례입니다. 시스템상 그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번호판을 떼야 했지만, 현장에서 본 그의 트럭은 낡았고 짐칸에는 배달 물품이 가득했습니다. 그 트럭은 그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단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번호판을 떼면 당장 일을 못 합니다.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의 호소는 변명이 아닌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행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법을 집행한다는 명분으로 한 가정의 생계 수단을 멈추게 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할까요?

우리는 ‘유연한 법 집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구청으로 안내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번호판 영치를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대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매달 조금씩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긴급 생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었습니다.